

정당방위 상황에서 행위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가해자 공격의도 유무와 피해자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관계*

오 지 향 조 은 서 김 혜 진 허 태 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이 법관의 정당방위 판결과 괴리감을 보인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이유에 주목하여, 일반인이 판단하는 정당방위와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인이 정당방위 상황에서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이것이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참가자 86명은 정당방위 상황에서 가해자의 공격의도(유/무)가 조작된 2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할당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지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결과,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공격의도 및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공격의도 인식이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낮게 인식하고 이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반면,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을 때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높게 인식하고 이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현재 정당방위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기저에 특정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가해자 공격의도의 유무와 피해자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당방위, 가해자 공격의도, 피해자 공격의도, 행위정당성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교신저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2, E-mail: tkhur@korea.ac.kr



© 2024,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흉기 난동, 흉기소지 및 협박 사건들로 국민의 충격과 불안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특히 적절한 방어행동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도둑놈사 사건¹⁾, 때맞는 아내 사건²⁾, 문지마 폭행에 대응한 사건³⁾ 등에서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이었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싸움 나면 무조건 맞고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이 너무 까다롭다.’, ‘미국이었으면 다 인정했을 텐데...’ 등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김병수, 2012; 김용애, 김민지, 2021). 게다가 2019년 경찰청 내부에서 마련한 정당방위 기준이 유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좁은 범위의 소극적 정당방위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하민경, 서용성, 김성화, 2019).

형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상황으로, 현재의 침해 행위만을 막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반복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하민경 외, 2019). 두 번째,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만 하며, 세 번째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추가 사항으로는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면제의 경우 그 행위가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로 국한된다. 앞서 언급한 ‘상당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최소한의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의 균형성, 그리고 수단 및 방법 선택에 의한 침해의 상당성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벼운 방어수단으로 침해를 최소화하고, 받은 피해보다 커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형법 제21조 2항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성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진다(김태명, 2000; 김슬기, 2017). 특히 우리 판례에서는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⁴⁾라고 결론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상당성의 기준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판단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다(조규홍, 2011; 김슬기, 2017; 박소현, 2023). 따라서 상당성에 대한 판단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박정남, 2018).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인정 사례가 적은 이유는 방어행동이 일련의 대응행위로 인한 싸움의 형태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까지도 법정에서는 방어행동이 맞대응으로 나타났을 경우, 피해자의 대응은 일종의 공격내지 보복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현재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8.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춘천) 2017노155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9.23. 선고 2022고정875 판결

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정147 판결

정당방위 관련 법의 기초에는 사회질서 유지가 개인의 권리보호보다 우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당방위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의도와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의도와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피해자 안전에 대한 침해를 막아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 방어 또는 그 이상의 행동까지도 용인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⁵⁾ 따라서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공격에 맞선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일반인은 가해자의 의도 및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로 인해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인식 간의 괴리감이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판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정당방위 판단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정당방위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정당방위 법에 대한 법감정 또는 괴리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

한국이 속해있는 동아시아는 유럽대륙의 시민법의 전통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더 중한 기준으로 여긴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법의 기준에서도 기존 사회와 질서의 유지, 집단의 안정적인 존속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우선하게 된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보통법에 근거하며, 사회의 질서 유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한다. 그에 따라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행위자의 위법한 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본인 또는 타인을

방위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이 합리적이라면, 타인을 향한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박소현, 2023). 이처럼 시민법과 보통법에 따라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심리학 분야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법문화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성유리, 김종한, Meyersburg, 박광배, 2013; 성유리, 박광배, 2012; 성유리 외, 2018).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당방위의 다양한 형태, 디지털 미디어가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다. 김용애와 김민지(2021)는 정당방위 유형을 자신, 타인, 국가기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정당방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당방위 불인정 기사를 제공받았을 때, 정당방위 인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특성인 폭력 허용도가 증가할수록,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인정률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부정적인 법적 태도를 지닐수록,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인정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연구들을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에서도 정당방위와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피/가해자 성별 및 신체적 특성, 판단자 개인의 성향, 고정관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Hodell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정당방위 상황에서 가/피해자 성별과 신체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신체적 특성이 우월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오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오히려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지각하였다. 판단자 개인의 성향이 정당방위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의 정당방위 상황으로 연구되었으며, 판단자가 세

5) MBC (2014.10.30.). 정당방위 적용 범위 논란... 시민과 전문가의 생각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429881>

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항하여 남편을 공격한 여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Schuller et al., 1994). 나아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Cooley et al., 2019). 이러한 국외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위정당성

행위정당성(Justifiability of behavior)이란 행위가 정당화되는 주관적인 정도를 의미한다(Suchman, 1995; Hilbig et al., 2022). 행위의 정당성을 인식할 때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황적 맥락, 의도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mes, 1998). 한 예로 냉소주의, 공정세상 믿음, 무규범성 등의 개인적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정적 행위의 정당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Hilbig et al., 2022).

하지만 개인의 고유한 특성의 영향이 아니라도, 인간은 어떤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유를 찾기 마련이다. Murdock 등(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르침에 열정이 없고,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생님의 강의에서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 준비도와 열정이 가득한 강의에서의 부정행위정당성은 낮게 나타났다. 즉, 수업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인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의 저항 여부, 가/피해자의 친분에 따른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행위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면, 가해자 행위에 대한 비난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Pollard, 1992). 여기서 비난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공격의도(Intent to harm)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ao, 2012). 예를 들어 나쁜 의도였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진 행위보다, 좋은 의도였지만 나쁜 결과로 이어진 행위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에 따른 정당성의 이유는 의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Nobes et al., 2017). 즉,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고, 나쁜 의도였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보다 의도가 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격의도(Intent to harm)란 행위자의 행동에 일부러 해를 입히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c.f., Horai & Bartak, 1978; Hermand et al., 2001). 법적 시스템에서 행위자의 의도는 도덕 및 처벌판단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icchieri & Maras, 2022; Mikhail, 2007). 특히 Heider(1958)는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연합 수준(association level), 두 번째는 원인제공 수준(commission level), 세 번째는 예측가능성 수준(foreseeability level), 네 번째는 고의성 수준(intentionally level), 마지막은 정당성 수준(justifiability level)이다. 이 5가지 수준을 차례로 거치며 책임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때 4번째 수준에서 고의가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다른 환경 및 상황적 요인들이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면, 정당성 수준(Justifiability level)으로 넘어가게 된다. 게다가 4번째 수준인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한 요인이며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Hamilton, 1978).

한편, 행위자의 의도와 비난, 책임 및 처벌과

간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사람들은 좋은 의도보다 나쁜 의도가 있을 때, 비난과 처벌의 강도가 강해졌고,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Fiske & Taylor, 1984; Yao & Siegal, 2021). Hogue와 Peebles (1997)의 연구는 성범죄 상황에서 가해자의 후회여부와 범죄의도가 징역 및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범죄의도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범죄 의도가 있을 때 집행유예보다 징역에 보내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Horan과 Kaplan (1983) 연구에서도, 가해자의 범죄 의도가 강할수록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 상황에서 피해 수준이 심각할 때, 그리고 가해자의 범죄의도가 강할 때, 가해자에 대한 선고 형량이 증가하였다. 부정적 의도가 있을 때 처벌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반대로 그만큼 가해자의 정당성은 낮게 인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격 행위 주체의 행위정당성은 공격의도에 비례함을 짐작할 수 있다.

흔히 범죄상황에서는 공격 행위의 주체가 가해자 한 명 뿐이지만, 정당방위 상황에서는 침해하려는 가해자와 이에 대응한 피해자로 행위 주체가 두 명 존재한다. 일반적으로(즉 일반인들은) 정당방위 상황에서 가해자를 공격한 피해자보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처벌을 부과하였다(Horai & Bartak, 1978; Hermend et al., 2001). 일관되게 Mazzocco et al. (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방위 상황 속 가해자의 정보에서 위협을 암시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 행위에 대한 비난과 처벌이 감소하였다. 더 나아가 자기 및 타인 방어를 이유로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의 행위를 허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Piazza et al., 2014). 심지어 사형, 성범죄자 거세, 절도 등 다양한 행위 목록에 대한 정당성 평가에서, 정당방위 살인이 가장 높은 점수로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Katz et al., 1994). 앞서 공격 행위 주체의 행위

정당성은 그의 공격의도에 비례해서 인식된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한 채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인들은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며,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에 따른 피해자의 공격의도 인식이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와 피해자의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이며 종속변인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다. 각 변인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본다면, 가해자의 공격의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러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이란 일반인이 보기에 피해자의 방위행위에서 일부러 가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가해자의 공격의도는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간 설계(Between Subject Design)로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에 따라 2개의 실험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참여자를 무선 할당하였다. 시나리오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각각 있거나 없는 상황으로 조작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행위에 대한 공격의도 인식 정도 또한 측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을 통해 집단 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의 차이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의 차이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가해자 공격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공격의도가 낮다고 인식하게 되어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가해자 공격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공격의도가 높다고 인식하게 되어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주요 논리

는 가해자의 공격유무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공격행위인지 판단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가해자의 공격의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공격의도 인식도 피해자의 행위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한 상해 사건과 관련한 정당방위 판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당방위 판결에 대해 일반인들이 법관과 차이를 보이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실제 정당방위로 인한 상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종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을 때 피해자의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을 때 피해자의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을 때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높게 볼 것이고,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을 때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낮게 볼 것이다.

가설 3.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에 따른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서 피해자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한국인 성인 남녀 8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조사업체 엠브레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표본 크기는 68명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불성실 응답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89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3명을 제외하여 총 86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책임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승인번호: KUIRB-2023-0061-01).

실험 절차

사전에 피험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을 읽었으며, 그 중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온라인 링크에 접속한 피험자들은 총 1개의 시나리오와 3개의 판결문을 읽으며 주어진 문항에 답변하였다. 시나리오는 가해자의 공격의도(유/무)가 조작되어 총 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중 1개의 시나리오에 무선 할당이 이루어졌다.

공격의도 조작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격의도를 조작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조작된 시나리오 2개 중 하나를 보게 된다. 자세한 시나리오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제시 후 가해자 공격의도에 대한 조작점검 1문항, 피해자의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 1문항,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 4문항을 측정하였다. 이후 실제 판결문 3가지를 제공한 후 판결의 신뢰도, 공정성, 만족도 총 3문항을 각 판결문마다 측정하였다. 실험 절차는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초반 연구 설명문의 실험목적과 실제 실험목적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기만에 따른 자료 이용 동의 여부를 응답한 뒤 모든 실험이 종료된다.

가해자 공격의도 유

A와 B는 직장 동료 관계로, 퇴근 후 A의 집으로 이동하여 거실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서로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실랑이로 이어졌다. 이전부터 A와 B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실랑이 과정에서 일어난 A는 먼저 욕설을 하면서 “너 오늘 어디 한번 나한테 뒤지게 맞아보자”며 앉아있는 B의 턱살을 잡아 끌어내어, B는 앉은 채로 계단으로 끌려나왔다. 이어 B의 머리가 계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힐 뻔한 순간, B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다급하게 “으아아악” 비명을 지르며 A를 밀어 넘어뜨렸고, A가 다쳤다.

가해자 공격의도 무

A와 B는 직장 동료 관계로, 퇴근 후 A의 집으로 이동하여 거실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서로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실랑이로 이어졌다. 실랑이 과정에서 일어난 A는 먼저 “오늘은 집에 가서 진정 좀 하고, 우리 내일 이야기하자”고 B를 타이르며, 앉아있는 B의 점퍼 앞부분을 잡아 끌어내어 B는 계단으로 끌려나왔다. 이어 B의 머리가 계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힐 뻔한 순간, B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다급하게 “으아아악” 비명을 지르며 A를 밀어 넘어뜨렸고, A가 다쳤다.

그림 1. 가해자 공격의도 유/무 조작 시나리오

측정 도구

조작점검

가해자 A의 B에 대한 공격의도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 문항을 넣었다. 단일 문항(A가 일부러 B를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다)으로 구성하였고,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되었다.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은 단일 문항(B가 일부러 A를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다)으로써,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되었다.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은 Quigley와 Tedeschi(1996), Murdock et al.(2004)의 문헌을 참고하여 정당성에 해당되는 총 4문항(주어진 상황에서 B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B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B가 그렇게 행동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었다, 주어진 상황에서 A는 피해를 입을만 하다)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문항은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되었다. 행위정당성 판단 4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다.

판결에 대한 인식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판결문은 총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실제 사례들을 찾아 제시하였다. 판결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공격의도가 명확히 있으며, 중대한 상해가 있는 사례들로 골라내었다. 참고한 판결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합 309 2018초기1075 판결(이하 판결문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7. 23. 선고 2009고합23 판결(이하 판결문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 102 판결(이하 판결문3)을 참고하여 요약 제시하였다.

판결에 대한 인식은 판결의 만족도, 공정성, 신뢰도 총 3문항(위 판결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판결에 신뢰하십니까?)으로 이루어졌으며, 7점 척

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되었다. 3문항의 판결문1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7, 판결문2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7, 판결문3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8이었다. 전체 판결문에 대한 총 9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2이었다.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SPSS 25 Macro PROCESS를 이용하여 조절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 정보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는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는 45명,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는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는 41명으로, 총 8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집된 참가자들의 성비는 정확하게 균등하였다(남자 43명, 여자 43명). 나이는 전체 평균 44세($SD = 13.93$)이었으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 별로 고르게 모집하였다. 집단별로 성별 및 연령 또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집단 간 성별($\chi^2 = 0.05, p = .829$) 및 연령($F(1, 84) = 0.002, p = .964$)의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 가해자의 공격의도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는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피해자 B에 대한 가해자 A의 공격의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였고($M = 5.27, SD = 1.75$),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는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피해자 B에 대한 가해자 A의 공격의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였다($M = 2.46, SD = 1.57$).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84) = 7.80, p < .001$), 가해자의 공격의도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가설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값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표 2). 이때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없음'이 0, '있음'이 1로 코딩되었으며, 이는 추후 분석에서도 적용되었다. 판결에 대한 인식은 모

표 1. 인구통계학 정보 ($N = 86$)

가해자 공격의도		유	무	계 (%)
성별	남자	23 (51.1%)	20 (48.8%)	43 (50.0%)
	여자	22 (48.9%)	21 (51.2%)	43 (50.0%)
나이	만 19세 ~ 29세	8 (17.8%)	9 (22.0%)	17 (19.8%)
	만 30세 ~ 39세	9 (20.0%)	7 (17.1%)	16 (18.6%)
	만 40세 ~ 49세	10 (22.2%)	10 (24.4%)	20 (23.3%)
	만 50세 ~ 59세	9 (20.0%)	7 (17.1%)	16 (18.6%)
	만 60세 ~ 99세	9 (20.0%)	8 (19.5%)	17 (19.8%)
	$M (SD)$	43.9세 (13.44)	44.1세 (14.62)	44.0세 (13.93)
계 (%)		45 (52.3%)	41 (47.7%)	83 (100%)

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1.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	-	-.28**	.43**	-.03
2.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		-	-.49**	-.01
3.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			-	.06
4. 판결에 대한 인식				-
<i>M</i>		2.37	4.85	3.15
<i>(SD)</i>		(1.50)	(1.29)	(1.26)

** $p < .01$

든 판결문에 대한 만족도, 공정성, 신뢰도 값을 합산 후 평균값으로 계산되었다.

기술통계값을 살펴보자면, 척도의 중간값(4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공격의도($M = 2.37$, $SD = 1.50$)는 대체로 낮다고 지각하였으며, 판결에 대한 인식($M = 3.15$, $SD = 1.26$)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판결의 만족도는 평균 3.20($SD = 1.30$), 판결의 공정성은 평균 3.12($SD = 1.28$), 판결의 신뢰도는 평균 3.12($SD = 1.27$)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r = -.28$, $p < .01$). 이는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다면,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r = .43$, $p < .01$).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다면,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

하다고 여기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이 있었는데($r = -.49$, $p < .01$), 이는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가/피해자 의도를 고려하는 정도와 판결에 대한 인식은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공격의도 및 행위정당성 판단의 차이 분석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 및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t(73.83) = 2.62$, $p = .011$) 및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t(84) = -4.42$,

표 3.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른 종속 변인들의 차이

가해자의 공격의도		<i>M</i> (<i>SD</i>)	<i>t</i>	<i>df</i>	<i>p</i>	Cohen's <i>d</i>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	무	2.80 (1.65)	2.62	73.83	.011	0.56
	유	1.98 (1.23)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	무	4.26 (1.19)	-4.42	84	<.001	0.95
	유	5.38 (1.15)				

$p < .00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는 조건에서는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는 조건에 비해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더 낮게 지각하고, 피해자의 행위가 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의 매개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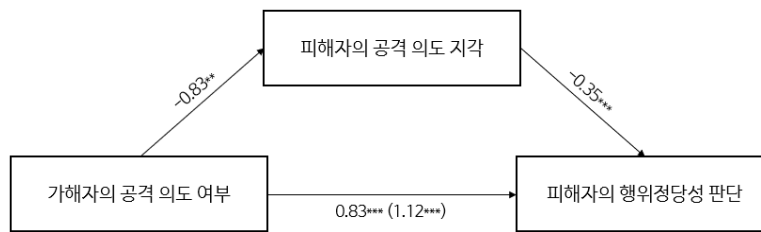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의 차이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의 차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Macro PROCESS 4.1(Hayes, 2018; Model 4)를 이용하여 10,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분석을 시행하였다. 예측 변인으로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 매개 변인으로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 결과 변인으로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이 투입된 매개분석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은 피해자의 행

위정당성 판단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결과 변인에 대한 예측 변인의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간접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 값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표 4). 즉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서,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이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을 때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낮게 인식하고, 이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반면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을 때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높게 인식하여,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논 의

본 연구는 가해자의 공격의도에 따라 행위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공격의도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가해자 공격의도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



주.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다. 괄호 안의 통곁값은 총 효과를 나타낸다.
** $p < .01$, *** $p < .001$

그림 2. 매개분석 모형

표 4. 간접효과 결과

간접효과	B	SE	95% CI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 →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 →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	0.29	0.13	[0.054, 0.438]

함으로써 시나리오의 수단으로 조작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행위정당성과 관련한 설문과 정당방위 판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다면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다면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과 부적 관계를 보여,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결과 변인에 대한 예측 변인의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하여 간접효과 검증 결과,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서, 피해자의 공격의도 지각이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을 때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낮게 인식하고, 이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반면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을 때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높게 인식하여,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또한, 사람들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의도를 고려하였다고 보고하였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방위 사건을 인식할 때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잠재의식적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대한 인식을 보았을 때, 국민들의 법감정은 현

재 판결과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방위 판결에 대한 인식은 평균 3.27($SD = 1.27$)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볼 수 있었다. 판결의 만족도, 공정성, 신뢰도 각각 따로 보아도 척도 중간값 아래로 나타나면서, 현재의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해자 공격의도 및 피해자의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정당방위 판결과 일반인의 판결에 대한 인식 간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실제 판결문을 통해, 중한 상해 상황에서 정당방위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 중에서 실제 정당방위와 관련한 판결문을 활용하여 일반인들의 판결 인식을 조사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추후에 중대한 상해 이외의 다른 범죄 유형(예를 들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판결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면 보다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어떤 상황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정당방위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사실상 국내법에서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데, 가해자의 공격의도는 중요치 않다. 가해자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가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지의 여부가 중요 기준이다. 이때 사람들은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높을 때, 부당한 침해를 당했다고 여기는 경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어도 부당한 침해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의 피해자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이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판결과의 괴리감 기저에 있는 심리적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국민과 사법부의 판단 사이의 괴리감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가는 실정을 고려해보면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서도 배심원들의 판단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함의로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가해자의 공격의도가 미치는 영향이 처벌판단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정당방위에 대한 처벌판단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지침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로지 개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 기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처벌판단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행위 정당성이라는 도덕 판단을 통해 정당방위에 대한 처벌판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사람들은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근본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추론은 고의성, 통제성, 처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Nichols, 2002; Uhlmann et al., 2015). 현재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와 판결문이 주로 상해 사건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죄 유형을 포함시켜 법적 지침에 따른 처벌 판단을 측정하는 연구의 확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른 정당방위 판단과 판결에 대한 인식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당방위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성향 및 가치관, 한국인들이 지니는 특성 등과 함께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김용애와 김민지(2021)의 연구에 따르면, 개

인 특성인 폭력허용도와 법적 태도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해볼 수 있는 개인 특성으로는 부정적 호혜성이 있다. 부정적 호혜성은 부정적 대우를 받았을 때 받은 만큼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재적 믿음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alk et al., 2018). 또한 부정적 호혜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의 정당성을 높이는 경향성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Hilbig et al., 2022).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 호혜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 특성과 행위정당성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저자 소개

오지향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문화 및 사회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 사회인지, 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조은서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문화사회성격 심리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온라인 공격행동, 일반인의 범죄인식, 교정, 범죄예방 분야에 있다.

김혜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진술분석과 범죄피해자 및 소년법 평가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로 진술분석, 면담기법, 사법판단 등을 비롯하여 법심리학과 범죄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허태균은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심리

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적 판단과 착각, 사후가정사고와 후회, 문화와 사고과정, 법적 판단, 여가심리, 한국인의 심리 분야에 있다.

참고문헌

- 김병수 (2012).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확대. *형사법연구*, 24(4), 47-75.
- 김슬기 (2017).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33(2), 27-43.
- 김태명 (2000). <논단>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형사법연구*, 14, 137-160.
- 김용애, 김민지 (2021).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2(2), 171-197.
<https://doi.org/10.53302/kjfp.2021.07.12.2.171>
- 박소현 (2023). 미국의 정당방위 법제와 시사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박정난 (2018). 이른바 '절도범 뇌사 사건'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 도 2794 판결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 노 11 판결). *일감법학*, 41, 287-315.
- 성유리, 박광배 (2012).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개인/집단주의 가치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3), 1-12.
<https://doi.org/10.21193/kjspp.2012.26.3.001>
- 성유리, 김종한, Cynthia A. Meyersburg, 박광배 (2013).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법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2), 69-83.
- 성유리, 김종한, Kosuke Wakabayashi, Cynthia Meyersburg, 박광배 (2018).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한국, 일본, 미국 법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9(2), 101-116.
- 조규홍 (2011).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의미 및 구체적 판단기준. *법조*, 60(6), 78-118.
- 하민경, 서용성, 김성화 (2019).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1), 1-273.
- Alicke, M. D. (1992). Culpable caus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368-378.
<https://doi.org/10.1037/0022-3514.63.3.368>
- Bicchieri, C., & Maras, M. (2022). Intentionality matters for third-party punishment but not compensation in trust gam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97, 205-220.
<https://doi.org/10.1016/j.jebo.2022.02.026>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ement of caus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46.
- Cushman, F. (2008). Crime and punishment: Distinguishing the roles of causal and intentional analyses in moral judgment. *Cognition*, 108(2), 353-380.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08.03.006>
- de Kwaadsteniet, E. W., van Dijk, E., Wit, A., De Cremer, D., & de Rooij, M. (2007). Justifying decisions in social dilemmas: Justification pressures and tacit coordination under environmental uncertain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2), 1648-1660.
doi.org/10.1177/0146167207307490, hdl.handle.net/1765/14502
- Cooley, E., Lei, R., Brown-Iannuzzi, J., & Ellerkamp, T. (2019). Personal prejudice, other guilt: Explicit prejudice toward Black people predicts guilty verdicts for White officers who kill Black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5(5), 754-766.
<https://doi.org/10.1177/0146167218796787>
- Falk, A., Becker, A., Dohmen, T., Enke, B.,

- Huffman, D., & Sunde, U. (2018). Global evidence on economic preferenc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3*(4), 1645-1692.
- Fiske, S. A., & Taylor, S. T. (1984). *Social Cognition*. Reading, Mans.: Addison-Wesley Publishing.
- Graham, K., Tremblay, P. F., Wells, S., Pernanen, K., Purcell, J., & Jelley, J. (2006). Harm, Intent, and the Nature of Aggressive Behavior: Measuring Naturally Occurring Aggression in Barroom Settings. *Assessment*, *13*(3), 280-296. <https://doi.org/10.1177/1073191106288180>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milton, V. L. (1978). Who is responsible?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Social Psychology*, *41*(3), 16-328.
- Heider, F. (1958). The naive analysis of action. In F.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pp. 79-124). John Wiley & Sons Inc. <https://doi.org/10.1037/10628-004>
- Hernand, D., Mullet, E., Tomera, P., & Touzart, V.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t, consequences, the dangerousness of the victim, and blame: The case of self-defense. *Psychology, Crime & Law*, *7*(1), 57-69. <https://doi.org/10.1080/10683160108401783>
- Hilbig, B. E., Moshagen, M., Thielmann, I., & Zettler, I. (2022). Making rights from wrongs: The crucial role of beliefs and justifications for the expression of aversive person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1*(11), 2730-2755. <https://doi.org/10.1037/xge0001232>
- Hodell, E. C., Wasarhaley, N. E., Lynch, K. R., & Golding, J. M. (2014). Mock juror gender biases and perceptions of self-defense claims in intimate partner homicid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9*, 495-506.
- Hogue, T. E., & Peebles, J. (1997). The influence of remorse, intent, and attitudes toward sex offenders on judgments of a rapist. *Psychology, Crime & Law*, *3*(4), 249-259. <https://doi.org/10.1080/10683169708410821>
- Horai, J., & Bartek, M. (1978). Recommended punishment as a function of injurious intent, actual harm done, and intended consequ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4), 575-578. <https://doi.org/10.1177/014616727800400416>
- Horan, H. D., & Kaplan, M. F. (1983). Criminal intent and consequence severity: Effects of moral reasoning on punish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4), 638-645.
- Howe, E. S. (1991). Integration of Mitigation, Intention, and Outcome Damage Information, by Students and Circuit Court Judge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11), 875-895.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1.tb00448.x>
- James, L. R. (1998). Measurement of personality via conditional reasoning.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2), 131-163. <https://doi.org/10.1177/109442819812001>
- Katz, R. C., Santman, J., & Lonero, P. (1994). Findings on the revised morally debatable behaviors scale. *The Journal of Psychology*, *128*(1), 15-21. <https://doi.org/10.1080/00223980.1994.9712707>
- Liao, S. M. (2012). Intentions and moral permissibility: The case of acting permissibly with bad intentions. *Law and Philosophy*, *31*(6), 703-724. <https://doi.org/10.1007/s10982-012-9134-5>
- Mazzocco, P. J., Alicke, M. D., & Davis, T. L. (2004). On the robustness of outcome bias: No constraint by prior culpabilit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2-3), 131-146.

- <https://doi.org/10.1080/01973533.2004.9646401>
Mikhail, J. (2007). Universal moral grammar: Theory, evidence and the futur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4), 143-152.
<https://doi.org/10.1016/j.tics.2006.12.007>
- Mulvey, K. L., Gönültaş, S., & Richardson, C. B. (2020). Who is to blame? Children's and adults' moral judgments regarding victim and transgressor negligence. *Cognitive science*, 44(4), e12833.
<https://doi.org/10.1037/0022-0663.96.4.765>
- Murdock, T. B., Miller, A., & Kohlhardt, J. (2004). Effects of Classroom Context Variables on High School Students' Judgments of the Acceptability and Likelihood of Chea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4), 765-777.
[https://doi.org/10.1016/S0010-0277\(02\)00048-3](https://doi.org/10.1016/S0010-0277(02)00048-3)
- Nichols, S. (2002). Norms with feeling: Towards a psychological account of moral judgment. *Cognition*, 84(2), 221-236.
[https://doi.org/10.1016/S0010-0277\(02\)00048-3](https://doi.org/10.1016/S0010-0277(02)00048-3)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Nobes, G., & Martin, J. W. (2022). They should have known better: The roles of negligence and outcome in moral judgements of accidental ac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13(2), 370-395. <https://doi.org/10.1111/bjop.12536>
- Nobes, G., Panagiotaki, G., & Engelhardt, P. E. (2017). The development of intention-based morality: The influence of intention salience and recency, negligence, and outcome on children's and adults'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3(10), 1895-1911.
<https://doi.org/10.1037/dev0000380>
- Piazza, J., Russell, P. S., & Sousa, P. (2013). Moral emotions and the envisaging of mitigating circumstances for wrongdoing. *Cognition & Emotion*, 27(4), 707-722.
<https://doi.org/10.1080/02699931.2012.736859>
- Pollard, P. (1992). Judgements about victims and attackers in depicted rapes: A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4), 307-326.
<https://doi.org/10.1111/j.2044-8309.1992.tb00975.x>
- Quigley, B. M., & Tedeschi, J. T. (1996). Mediating effects of blame attributions on feelings of ang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80-1288.
<https://doi.org/10.1177/01461672962212008>
- Schwartz, F., Djeriouat, H., & Trémolière, B. (2022). Judging accidental harm: Reasoning style modulates the weight of intention and harm severity.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5(12), 2366-2381.
<https://doi.org/10.2224/sbp.1975.3.1.5>
- Shaw, J. I., & McMartin, J. A. (1975). Perpetrator or victim? Effects of who suffers in an automobile accident on judgemental strict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1), 5-12.
<https://doi.org/10.2224/sbp.1975.3.1.5>
- Suchman, M. C. (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https://doi.org/10.5465/amr.1995.9508080331>
- Schuller, R. A., Smith, V. L., & Olson, J. M. (1994). Jurors' Decisions in Trials of Battered Women Who Kill: The Role of Prior Beliefs and Expert Testimony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4), 316-337.
- Thorley, C., & Rushton Woods, J. (2013). Blame conformity: Leading eyewitness statements can influence attributions of blame for an accid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7(3), 291-296.
<https://doi.org/10.1002/acp.2906>
- Uhlmann, E. L., Pizarro, D. A., & Diermeier, D. (2015).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Moral Judgmen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1), 72-81.

<https://doi.org/10.1177/1745691614556679>

- Wotton, M. E., Bennett, J. M., Modesto, O., Challinor, K. L., & Prabhakaran, P. (2022). Attention all 'drivers': You could be to blame, no matter your behaviour or the level of vehicle automa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87, 219-235.
<https://doi.org/10.1016/j.trf.2022.03.021>

- Yao, E., & Siegel, J. T. (2021).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intentionality and controllability on perceived responsibility: Applying attribution theory to people's responses to social transgression in the COVID-19 pandemic. *Motivation Science*, 7(2), 199-206.
<https://doi.org/10.1037/mot0000220>

1 차원고접수 : 2023. 11. 02.

수정원고접수 : 2024. 01. 23.

최종게재결정 : 2024. 02. 06.

When do self-defence acts look justifiable?: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victim's intents to harm depending on offender's intents to harm

Jihyang Oh Eunseo Jo Hye jin Kim Taekyun Hur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Korean law describes that the legal judgment of self-defence should accord with the victim's intent to harm the offender, which could be a major cause of distrust toward the legal system. This may due to how lay people rely on the information regarding offenders' intent to harm victims for self-defence judgement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perceived justifiability of a victim's self-defence act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role of victim's intent to harm the offender in regards to offender's intent to harm the victim. Eighty-six participants read a scenario varying with offender's intent to harm (i.e., intent to harm included or no intent to harm) and made judgments of justifiability and perceived self-defence on the victim's a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lusion of offender's intent to harm influenced perceived victim's intent to harm as well as justifiability of victim's action. When the offender had the intent to harm the victim, the victim was perceived to have lower intent to harm the offender and victim's actions were seemed more justifiable and more self-defending. Furthermore, the perceived victim's intent to harm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on the justifiability of the victim's act depending on the inclusion of offender's intent to harm. The findings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potential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lay people's judgements regarding self-defence cases.

Key words : Self-defence, offender's intent to harm, victim's intent to harm, justifiability of behavior